

2023년 5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귀하
04383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전자우편: president@president.go.kr

참조.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팩스: +82 44 200 2144

박진 외교부장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팩스: +82 2 2100 7934 / 7965 / 7967

권영세 통일부장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팩스: +82 2 2100 2319 / 2379

한동훈 법무부장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팩스: +82 2 2110 0351 / 3113

내용: 국제강제실종주건을 맞아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이행입법의 조속한 완료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통하여 북한이 자행한 납치 및 강제실종에 대한 사법적 책임규명을 보장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는 국제강제실종주건을 맞아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이행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한 사법적 책임규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은 2023년 1월 4일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은 30일 후인 2월 3일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하였으나 한국은 여전히 강제실종 범죄의 처벌을 포함한 강제실종방지협약상 의무의 충족에 필요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행입법의 부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소급적용 금지 원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향후 한국 국내법원에서의 북한의 납치 및 강제실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내 형사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전문가들 및 법무부·외교부·국방부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¹ 과거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라도반 카라지치 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권오곤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위원회는 이행법안 준비라는 위원회의 임무를 다하였습니다.² 또한 국회

¹ 법무부 및 외교부, 보도자료: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국무회의 의결(2022. 6. 21.), <https://www.moj.go.kr/bbs/moj/182/560423/artclView.do>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431

² 법무부, (예규 제1262호)-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운영지침, <http://www.moj.go.kr/bbs/moj/155/530973/artclView.do>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용기 의원³ 및 김기현 의원⁴의 이행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행입법 절차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인권침해 답문서를 이관받아 가해자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강제실종을 비롯한 인도에 반한 죄와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의 수사 및 기소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부터 정부과천청사로의 복귀 및 검사 재파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3년 5월 22일 기준)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어드보카시 포럼

아시아 비자발적 실종 반대 연합(AFAD)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실종자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원회(KontraS)

북한인권위원회(HRNC)

분쟁 피해자를 위한 정의 모임(CVSJ)

인권 수호(DHR)

한보이스

인도네시아 실종가족협회(IKOHI)

국제 강제실종 반대 연합(ICAED)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세이브 NK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³ 대한민국 국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안 제2107371호, 2021. 1. 14.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E1S0R1F0T8B1V6Z2W9P1X1B2Z7C7

⁴ 대한민국 국회,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의안 제2115792호, 2022. 5. 30.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B2M0R4W2K1E1J7M2S9C4O4X2T9D1

